

대학 2학기 대면활동 초읽기... 실기 수업부터 단계적 확대

교육부, 대학 대면 활동 확대 방안 대면 수업 폭, 대학 재량으로 결정 유학생, 유휴 호텔 등서 자가격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오는 2학기 초·중·고교 전면 등교에 이어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인 9월 말을 기점으로 대학 학내 대면 활동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실습·실습·실기 수업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1차 백신 접종 완료 이후부터는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단, 대면 수업 폭은 개별 대학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21학년도 2학

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습·실습·실기 수업부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한다. 방역이

쉬운 소규모 수업 역시 대면으로 운영하고 1차 백신 접종 완료 이후인 10월경부터는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문대학은 수업연한이 짧고 실습·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방역하에 대면수업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면·비대면 동시 수업,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등 대학이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을 지속해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유학생, 장애 학생 및 코로나19 확진 이후 학내 복귀 학생 등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업 외 활동은 1차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는 소규모 대면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대규모 대면행사 및 축제는 금지한다. 이후 백신 접종 상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생회, 동아리를 포함한 학생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수업 외 학내 활동은 시기별·유형별로 세분화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대면수업 확대 방향은 초·중·고교와 다른 대학의 상황과 감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며 "대학별 대면수업의 폭은 방역 지침 준수 전제하에 대학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역 강화국가 외국인 유학생은 유휴 호텔,

기숙사 등 급속 학교 확보 시설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2회 이상 관찰(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개강에 맞춰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인 9월 한 달을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 대학이 함께 집중 방역관리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2학기 대면수업 확대가 대학의 일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잘 챙기겠다"며 "방역과 교육 모두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질병청, 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대교협·전문대교협 “등록금 반환 어렵다” ‘지하철 개인창고서비스’ 12개 역으로 확대

교육부 “반환, 대학-학생 협의사항” 학생 대상 추가 지원 올해 계획 없어



(왼쪽부터)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남성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프리핑에서 대학생 대상 등록금 반환은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전국 대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지난해 납부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대구보건대학교 총장)가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의 협의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 관련 "학생 입장은 이해하지만, 대학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확장 등으로 행·재정적 추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요구는 받들기 어렵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도 "전국 전

문대학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학생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업 결손을 없애기 위해 철저히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등록금은 수업 이외에도 학생의 모든 활동 지원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나갈 문제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 차원 추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은욱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나해부터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나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원의 학생 대상 추가 지원도 올해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 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지구 노력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을 간접 지원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개인창고장기대여 서비스인 '또타 스토리지'를 12개역(13개소)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타 스토리지는 캠핑용품, 계절의 류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소형가전, 가구까지 기간 제한 없이 이용자가 직접 물건을 보관하고 찾아갈 수 있는 '개인 창고' 서비스다.

새롭게 추가되는 또타 스토리지는 9개역 10개소다. 장소는 ▲5호선 신정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광흥창역·창신역 ▲7호선 중계역·태릉입구역(2개소)·상봉역·반포역·신풍역이다. 기존 3개소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주거비 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창고는 0.3평형과 0.5평형 총 2가지 유형이 있다. 0.3평형(월 7만9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가로 48cm×세로 38cm×높이 34cm) 10개 가량을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취미용품·계절의류 수집품 보관 등에 적합하다. 0.5평형(월 13만1000원)은 5호박스 20~25개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소형가전·가구나 원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 설치된 또타 스토리지. /서울교통공사

룸 이삿짐 등을 두면 편리하다.

공사 관계자는 "창고는 향온·향습 시설이 완비돼 최적의 상태로 짐을 보관할 수 있으며, 내부를 실시간 녹화하는 CCTV도 설치돼 안전하다"면서 "보관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보상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2023년까지 또타러기지(유인보관소), 또타스토리지 등 생활물류센터 5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역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심정지 학생 구한 셔틀버스기사에 의인상

호서대, 박진수 기사에 수여



박진수 씨와 김대현 호서대 총장(오른쪽)이 감사패 전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서대

심정지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대학 셔틀버스 기사가 대학 측으로부터 '의인상'을 받았다.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박진수 기사에게 '호서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진수 씨는 지난 8일 셔틀버스 운행 중 천안역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발견해 119구급대가 도착 전까지 골든타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의식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통상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현 총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로 귀한

생명을 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진수 씨는 "매년 2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 이번 사례처럼 위험에 빠진 학생을 구할 수 있었다"며 "호서 의인상을 주신 김대현 총장님 외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전의찬 세종대 교수 기후변화위원장 선임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전의찬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고 24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국무총리와 중앙 18개 부처 장관과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변화, 경제산업, 에너지혁신 등 모두 8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전 교수는 기후변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종합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7인 발족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시는 내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서울시는 인력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륜사무소 민선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흥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환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현정 기자